

보도시점 2024. 4. 21.(일) 11:00
4. 22.(월) 조간

배포 2024. 4. 19.(금) 16:00

10년간의 농촌공간계획을 위한 밑그림 나왔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발표

- 139개 시·군 농촌공간계획 수립, 중앙-지자체 농촌협약으로 5년간 최대 300억 원 통합 지원
- 공간 재구조화, 주거·정주, 경제·일자리, 생활서비스, 경관·환경, 공동체·활력 등 6대 정책방향 제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위기와 난개발 등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기능 재생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이하 농촌공간기본방침)을 발표했다.

농촌공간기본방침은 올해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식품부가 10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국가 차원의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 계획이자 시·군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지침이 된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기본방침(안)을 마련하여 지자체 및 중앙부처 협의를 거쳤으며, 지난 4월 18일 농촌공간정책심의회(공동 위원장 : 한 훈 차관, 이유직 부산대 교수)를 거쳐 기본방침을 심의하고 확정·발표하였다.

농촌공간기본방침은 송미령 장관이 밝힌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라 ‘국민 누구나 살고, 일하고, 쉬는 열린 기회의 공간’을 비전으로 삶터, 일터, 쉼터 등 3대 목표와 농촌공간 재구조화, 주거·정주, 생활서비스, 경제·일자리, 경관·환경, 공동체·활력 등 6대 전략 및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 성과목표 : (삶터) 농촌공간 정비 및 재생 지원 : 2023년 68개소 → 2033년 200개소
(일터) 농촌 창업 비율 증가 : 2023년 20% → 2033년 25%
(쉼터) 농촌 관광·방문을 제고 : 2023년 55% → 2033년 65%

농촌공간기본방침에 따라 중앙정부 중심의 개별 사업 지원에서, 지자체·주민 등이 주도하여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예산 등을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틀이 완전히 전환된다. 139개 농촌 시·군은 농촌공간기본방침에 따라 내년까지 지자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화지구 등을 중심으로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한다.

시·군은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주거,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등 기능별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 관련 시설을 집적한다. 농촌마을보호지구에는 주택, 생활서비스 인프라가 모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등에는 기업체, 스마트팜, 축사 등 산업별 시설이 집적할 수 있게 하여 시너지 효과를 낸다. 정부는 농·산지 규제 완화, 사업 집중 지원 등을 통해 농촌특화지구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농촌특화지구 유형 : ①농촌마을보호지구, ②농촌산업지구, ③축산지구, ④농촌융복합산업지구, ⑤재생에너지지구, ⑥경관농업지구, ⑦농업유산지구

시·군은 특화지구 배치 등을 토대로 3개 내외의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고, 정주여건 개선, 경제·일자리 기반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시·군이 주민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지자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5년간 최대 300억 원의 국비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둘째, 농촌의 주거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장기적으로 정주 기능을 유지하고 인구 유입 가능성이 큰 마을을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읍·면 소재지, 복합서비스시설 인근 등으로 신규주택 입지를 유도하여 보육·교육·문화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원활해지도록 한다. 정주 환경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의 이전·집단화 및 공간 재생을 지원하고, 빈집·노후주택 등 주거환경의 체계적 정비 및 활용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생활서비스 거점을 육성하고 혁신적 서비스 전달 모델을 확산한다.

시·군별 생활권 거점 역할을 할 읍·면 소재지 등에 필수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중심지-기초생활거점-배후마을을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서비스를 공급한다. 또한, 행정·복지·교육·문화 등 시설을 복합단지화하여 주민들이 한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먼 거리, 낮은 인구밀도 등 농촌의 생활서비스 공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모델 도입을 확대하고, 주민과 지역 공동체가 서비스 공급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등 생활서비스 전달 체계를 다각화한다.

넷째, 농업에서 나아가 사람·기업·농촌자원이 융복합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수직농장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 등장에 맞춰 입지 규제 완화 등 기존 제도를 정비한다. 경관·생태·문화 등 농업 이외에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 기업가 대상 창업 단계별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개별업체 단위 농촌융복합산업을 고도화하여 지역 단위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 등까지 정책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간다.

다섯째, 경관, 농업유산, 생태·환경 등 농촌의 고유한 가치를 보전하고 매력을 높인다.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를 활용하여 지역의 경관작물을 집단화하고, 특색있는 지역 농업유산에 대한 보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주민의견 수렴을 토대로 재생에너지지구를 지정하여 태양광시설 등 집단화를 유도하고, 에너지 절감 및 효율 향상 시설을 지원하여 농촌 에너지 자립 마을을 조성한다.

여섯째, 생활인구 활동 기반을 확충하는 등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다.

인구감소·공동화 등 농촌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행정리 단위에 한정하지 않는 유연한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한다. 지금까지 귀농·귀촌인 거주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4도 3촌, 위케이션 등 다양한 유형의 체류·교류를 정책 범위를 확대한다. 빈집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농촌에서 체류·교류를 희망하는 생활인구의 활동 기반을 조성한다.

한 훈 농식품부 차관은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농촌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삶터, 다양한 기회가 있는 활기찬 일터, 매력적인 쉼터로서, 모든 국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며, “국토 면적 89%를 차지하는 농촌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 등 국민의 다양한 수요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관계부처 등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농촌공간계획 인포그래픽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요약)
3. 제1회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개요

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	책임자	과 장	김보람 (044-201-1551)
		담당자	사무관	한 민 (044-201-1556)





■ 언제 어디서나 삶에 불편이 없도록 농촌 생활공간 재구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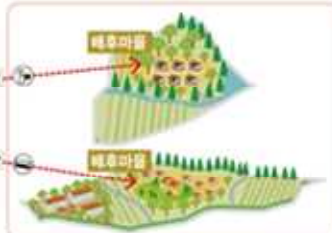
주거, 산업, 서비스 기능을 계획적으로 배치



(중심지) 서비스 제공 기관 집적



(소멸위험 마을) 찾아가는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2 지역이 스스로 주도하는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통합 지원

주인제안 및 주민협정 제도 도입, 지역 주체 아이디어 실행 지원



지역이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중앙 - 지자체 간 재정 지원을 위한 농촌협약 체결



I 수립 배경

- 농촌 투자 확대로 생활 인프라 등이 개선되고 있으나, 난개발 및 농촌소멸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역부족
 - 그동안 농촌은 주거, 경제기반 등에 대해 개별·분산적 개발
 - 농촌 공간의 효율적 이용·관리 미흡으로 난개발 및 성장 잠재력 저하
 - * 마을이 위치한 관리지역(전체 농촌의 27%)에 다양한 개발행위가 허용되어 난개발 심화
 - 최근 농업뿐만 아니라 창업, 여가·휴양 등 농촌 공간에 대한 새로운 수요 확산, 사업별 경직적 정책으로는 다양한 인력·자본 유입 한계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4.3.29. 시행)에 따라 지역 주도, 종합계획 기반의 지역 발전 체계로 정책 전환
 - 지자체는 주민, 공동체 등 지역 역량을 바탕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재정 등 통합 지원
 - 기본방침을 통해 중앙정부 정책방향과 지자체 계획의 조화·연계 강화

기본방침의 범위 및 성격

- 시간적 범위 : 2024년 ~ 2033년
- 공간적 범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 기본방침의 성격 :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되는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중장기 방침
 - * 국가 기본방침(10년) → 시·군 기본계획(10년) → 시·군 시행계획(5년)
- (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기능 재생·증진을 위한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10년 단위 계획
- (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기본계획을 토대로 농촌재생활성화 지역의 공간 정비, 정주여건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수립하는 5년 단위 실행계획

⇒ 난개발, 농촌소멸 등에 대응하여 농촌의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공간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마련

Ⅱ 농촌의 현황 및 여건 변화

1 현 황

- (인구) '22년 기준 농촌 인구는 약 961만 명(전체 인구의 18.6%)이며, 면 지역 중심으로 인구감소·고령화 * 고령화율(%) : ('22) 전국 17.7 < 읍 18.4 < 면 32.4
- (토지이용·주거) 도시적 토지이용 목적 농·산지 전용 및 개발허가가 증가하고 있고, 주거지 인근에 악취·소음 등 발생시설 다수 입지
* 주거지와 500m 이내에 공장(82%), 축사(77%), 태양광시설(62%) 과반수 분포('19)
- (생활서비스) 읍·면 인구 규모에 따라 생활서비스 시설 보유 차이*, 읍·면 지역이 동 지역보다 의료·보육·문화시설까지 접근성 불리**
* (인구 3천 명 이상) 병원, 식당 등 일정 정도 유지, (천 명 이하) 과반수 이상이 시설 부재
** 의료기관 : (읍) 17.3분, (면) 21.6, (동) 15.8 / 어린이집 : (읍) 14.3, (면) 16.4, (동) 11.3
- (일자리·경제) 농가인구·경지면적은 감소*하나, 농촌융복합산업(매출 총 31조원), 스마트팜(온실 14%, 축사 23% 보급) 성장과 함께 농촌 창업 증가**
* 농가인구 : ('00) 401만 명 → ('22) 217 / 경지면적 : ('00) 189만 ha → ('22) 153
** 신규 창업 중 농촌지역 비중 : ('10) 14.3% → ('15) 17.1 → ('21) 20.1

2 여건 변화

- (인구구조 변화)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추세는 지속될 전망
* 농촌인구: ('22) 961만 명 → ('50) 845(약 12%↓) / 총인구: ('22) 5,167만 명 → ('50) 4,711(약 9%↓)
- (위기요인) 농촌소멸에 따라 생활서비스 시설 휴·폐업, 농촌공간 유희화 및 인근도시 기능 쇠퇴 등 연쇄적인 사회·경제적 악영향 발생
- (기회요인) 농촌을 무대로 한 국민의 장래활동 수요 등 잠재력이 재조명받고 있으며, 저출생 대응 등을 위한 농촌공간 역할 확대
* 도시민 중 14%가 5년 이내에 농촌에서 버킷리스트를 실현할 준비 중('19, KREI)
농촌 관광·방문율 : ('20) 47.0% → ('22) 54.8(농진청, 농촌관광실태조사)
* 도시 인구 집중도(431.9)가 OECD 평균 수준(95.3) 감소 시 합계출산율 0.41명 상승 효과(한국은행)
- (향후 과제) 농업인과 더불어 생활인구, 청년, 기업가 등 국민의 다양한 수요가 농촌에서 실현되도록 종합적 관점에서 주거·일자리 등 정책 수립

Ⅲ 비전 및 전략

비전	국민 누구나 살고, 일하고, 쉬는 열린 기회의 공간, 농촌		
목표	400개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설정 및 지역 주도 발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삶터 농촌공간 정비(68→200개소)	다양한 기회가 있는 활기찬 일터 농촌창업 증가(전체 20→25%)	국민 모두에게 매력적인 쉼터 농촌 관광방문을 제고(55→65%)
기본 방향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대전환		
	- 청년, 기업가, 농업인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 -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 - 집적화되고 기능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 공간		
추진 전략 및 과제	농촌공간 재구조화 - 농촌특화지구를 통해 주거산업 등 기능별 배치 - 시군별 3개 내외 재생활성화지역 설정, 지역별 발전전략 제시	주거·정주 - 거점마을 육성 - 청년, 귀농귀촌인 주거환경 조성 - 빈집 등 유휴시설의 체계적 정비·활용	생활서비스 - 서비스 거점 육성 - 중심지-기초거점-배후마을 연결 - ICT 활용, 지역공동체 서비스 공급 참여
	경제·일자리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확대 - 농촌융복합산업 고도화	경관·환경 - 경관농업지구 및 농업유산지구 활용 - 주민 참여 환경관리, 재생에너지 확산	공동체·활력 -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공동체 재활성화 - 농촌에서 활동·교류 등 생활인구 활동기반 조성
추진 기반	농촌공간계획, 농촌협약, 규제혁신, 협업		

IV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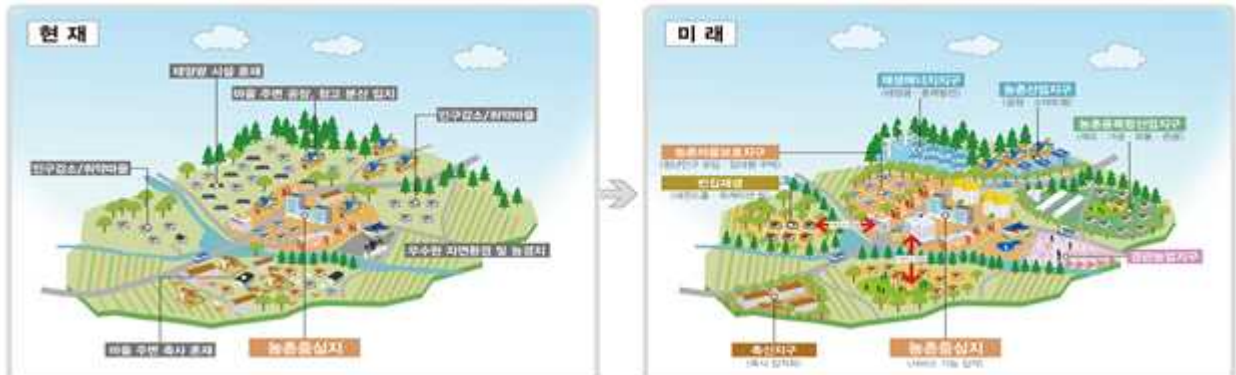
1. 농촌공간 재구조화

- ◇ 139개 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수립
- ◇ 지속가능한 생활권을 위한 농촌재생활성화지역 400개소 설정

- **(정책 전환)** 농촌 정책 방향을 기존 점(點) 단위 접근에서 면(面) 단위 접근으로 전환하여 공간에 기반한 계획적인 개발·이용·보전 추진
 - 정부는 기본방침으로 최소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이 주도하여 상향식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 틀 전환
 - * 지역의 수요와 혁신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협정·제안 제도 도입

구분	기 준	전 환
기본 방향	점(點) 단위 분산 접근	면(面, 공간) 단위 계획적 접근
정책 주체	중앙정부 중심	지자체, 지역 주민·기업, 생활인구
정책 지원	개별 지원사업 위주	통합 지원, 규제 완화
공간 인식	농업 생산 공간 유보지 성격으로 개발·보전 충돌	창업·휴양 등 확대, 독자적 계획 수립 공간으로 개발·보전의 조화

- **(농촌특화지구)** 농촌공간을 주거, 축산, 공장, 융복합산업 등 7개 기능별로 구획·집적화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산업육성 기반 강화
 - * 지구 유형 : 농촌마을보호지구, 산업, 축산, 농촌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 규제 완화(농·산지 등), 관련 사업 집중 지원으로 시설 집적 유도



-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생활권을 기초로 산업·교통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3개 내외 재생활성화지역(400개소)을 설정하고 지역별 발전전략 수립 및 재생사업 추진

<농촌재생활성화지역>



- 중심지-거점마을-배후마을 체계를 갖춰 생활서비스 전달 기능 활성화

- **(통합지원)** 지자체가 주민 등과 함께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지자체 간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5년간 최대 300억원 패키지 지원

2.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

◇ 농촌공간 정비 및 재생 지원 : ('23) 68개소 → ('33) 200

< AS-IS >

· 마을 단위 개발



< TO-BE >

· 전체 생활권 관점으로 접근

- **(기존 마을)** 농촌 인구 공동화 문제에 대응하여 장래 정주 기능을 유지하고 인구 유입 가능성이 큰 마을들에 대해 인프라 투자 강화
 -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을 통해 유해시설 입지를 예방하고, 보건·교육 등 주민생활 필수 시설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진입 활성화
 - 정주 환경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의 이전·집단화 및 공간재생 지원
- **(신규 주택)** 청년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 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농촌형 임대주택을 조성하고, 일자리·생활서비스 접근성 강화
 - 보육, 교육, 문화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원활하도록 읍면 소재지, 복합서비스시설 인근 등으로 신규 주택 입지 유도
- **(빈집·유휴시설)** 주거환경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사업 체계 구축
 - 빈집은행 운영, 민간플랫폼 연계를 통해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연계 빈집 재생사업(숙박업 등) 확대
 - 유휴시설 DB를 구축하고, 주거·서비스 등 신규 시설 건립 시 우선 활용
 - 노후주택 개량, 취약지역 생활 개선 등 주거 정비·지원 수단 다각화

3-1. 생활서비스 거점 육성

◇ 중심지에 복합 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 주변 마을과 서비스 연계

< AS-IS >

- 모든 읍·면에 일률적 지원
- 서비스 시설 분산



< TO-BE >

- 중심지 읍·면을 거점으로 육성
- 복합단지화로 편의성 제고

- **(거점 육성)** 시·군별 생활권 거점 역할을 할 중심지 읍·면 선별 육성
 - 타 부처 사업을 종합 연계하여 지역밀착형 생활SOC 복합센터, 의료·돌봄 거점마을, 초등학교 시설 복합화 등 서비스 거점 조성
- **(서비스 연계)** 생활권의 중심지-기초생활거점-배후마을을 체계적 연결
 - 서비스 시설별 적합한 공급 범위를 조사하여 중심지, 기초생활거점 등 공간 계층별로 집중 투자가 필요한 시설을 적지 배치
 - * (예) 중심지 : 응급실 운영 의료시설, 하위거점 : 의원·약국 등 기초 의료시설
 - 수요응답형 등 농촌형 교통모델을 확충·고도화하여 중심지 접근성을 높이고, 도시 인근 지역은 해당 생활 서비스 인프라와 연계 강화

3-2. 혁신적 생활서비스 전달 모델 확산

◇ 디지털 전환 및 민간 참여에 기반한 생활서비스 전달 체계 다각화

< AS-IS >

- 시설을 통한 서비스 전달
- 공공기관 중심



< TO-BE >

- 스마트 기술 활용 원격 모델 활성화
- 주민, 지역공동체가 공급 주체로 참여

- **(스마트 기술)** 먼 거리, 낮은 인구밀도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I, IoT, 자율주행 등 기술 접목 모델 개발·도입, 주민이용 편의성 지원
 - 농촌공간 테스트 베드화, 리빙랩 등 다양한 모델이 시도되는 환경 조성
- **(민간 참여)** 지역 주민이 서비스 공급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농촌 서비스 공동체'를 육성하고 '농촌서비스협약' 등 지원체계 구축
 - 주민, 귀농·귀촌인, 청년, 반농반X 등이 돌봄·교육, 문화·예술 등 분야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형성, 활동 공간 등 지원

4.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농업에서 나아가 사람·기업·농촌자원이 융복합하는 창의적 산업 생태계 조성

* 신규창업 중 농촌지역 비중 : ('21) 20% → ('33) 25

< AS-IS >

- 농산물 가공·체험 위주
- 농촌융복합 인증사업자 위주



< TO-BE >

- 농촌 유무형 자원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 예비 창업자도 포함

- **(농업)**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로 수급불안·고령화 대응 및 혁신 동력 제고
 - 청년농의 진입·성장에 필요한 농지·시설·자금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온실·축산·노지 등 분야별 스마트농업을 고도화하여 농업 생산 디지털 전환
 - 축산지구 조성 및 시설 개선 등 사업 연계로 친환경·스마트 축산 육성
 - 농업기술 혁신에 따른 수직농장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 등장에 맞춰 기존 제도 정비(입지규제 완화* 등), 특례 제공 등 지원 강화
 - * 스마트농업지구(스마트농업법), 농촌산업지구 등을 활용하여 농지 위에 수직농장 설치 허용
- **(창업)** 유·무형 자원(생태·문화·경관 등)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 지원
 - 민간 참여로 특산물, 문화, 유희시설 등 지역자원을 조사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의 기초자료로 제공
 - 청년 등을 대상으로 <예비·관심>농촌 체험·교육, <준비>기초 조사 및 준비, <진입·성장>자금 컨설팅, <주거>보금자리 주택 등 창업 단계별 종합 지원체계 구축
 - * 지역 내 창업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타부처 사업을 포함하여 체계적 지원
 -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한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 * 지역 주민 등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스스로 규제 또는 규제 완화를 계획하는 자율규제 방식
- **(융복합)** 기존 농촌융복합산업을 고도화하여 '농산업 혁신벨트' 구축
 - 기존 개별업체 단위의 농촌융복합산업을 시·군 단위 등으로 확장하고, 선도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지역 내 농업생산·식품·관광 등을 함께 연계
 - 농촌형 비즈니스 및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까지 정책 지원 대상 확대

5. 농촌 경관 및 환경의 보존·관리

◇ 시·군별 1개 이상의 경관농업, 농업유산 보전지구 육성

< AS-IS >

· 도·농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중심



< TO-BE >

· 경관, 농업유산, 생태·환경 등 농촌
고유의 특색있는 가치 보전

- **(경관)** 경관농업지구를 활용하여 동종·유사 경관작물 집단화 유도
 - 지역 특색을 살린 디자인 원칙을 마을 정비, 신축시설 건립 시 적용
 - * 주민 의견수렴, 자율 규제 등을 거쳐 건물 형태·소재, 지붕 색깔 등 통일
- **(농업유산)** 세계·국가중요농업유산 외에 지역 차원의 특색있는 농업 유산을 신규 발굴하고, 농업유산지구를 통해 체계적 관리체계 마련
 - 조사, 보전·관리, 관광 활용 등 지역주민·청년의 전 주기 참여체계 구축
- **(생태·환경)** 주민 참여 생태·환경 관리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확산 촉진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지원대상·활동 확대·개편 및 모니터링 강화
 - 주민제안 등을 토대로 재생에너지지구를 지정하고 태양광시설 등 집단화 유도
 - 에너지 절감 및 효율향상 시설 지원으로 농촌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6. 농촌 공동체 활성화 및 활력 제고

◇ 농촌과 국민의 접점을 늘려 '생활인구' 활동 기반 확충

* 농촌 관광·방문율 : ('22) 54.8% → ('32) 65.0

< AS-I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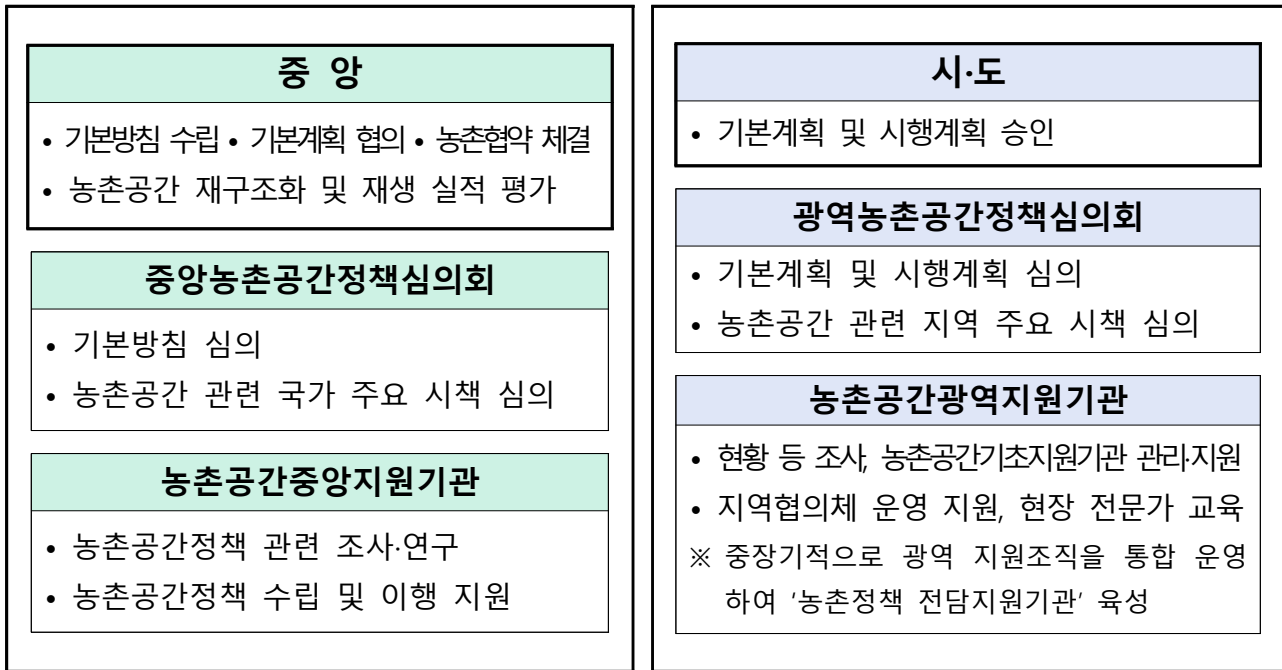
· 귀농·귀촌 등 거주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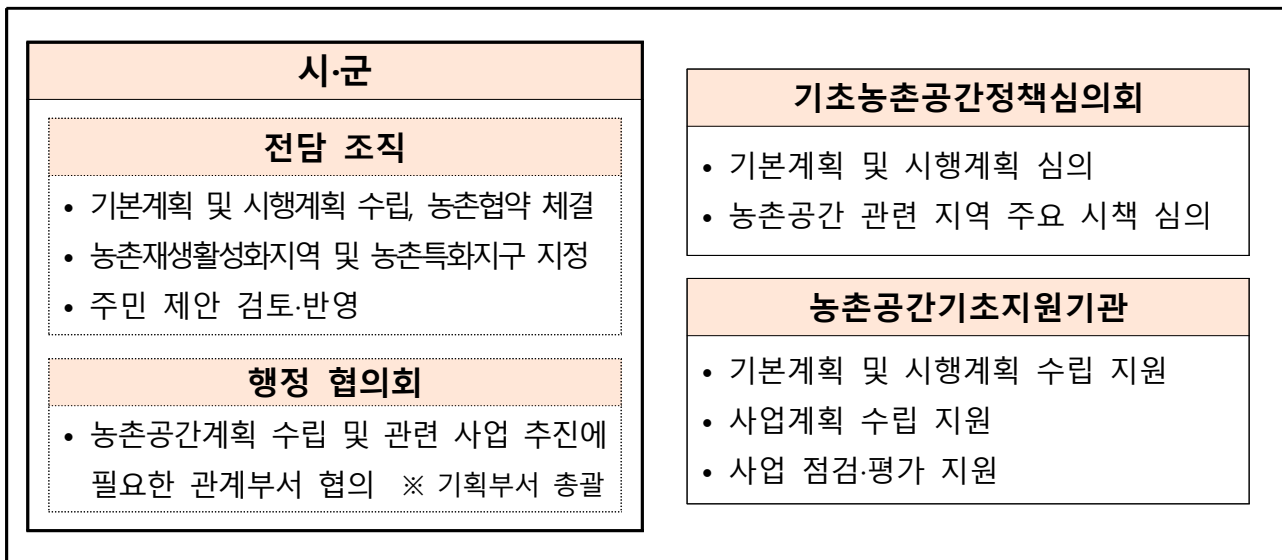
< TO-BE >

· 농촌에서의 체류·교류 등 생활인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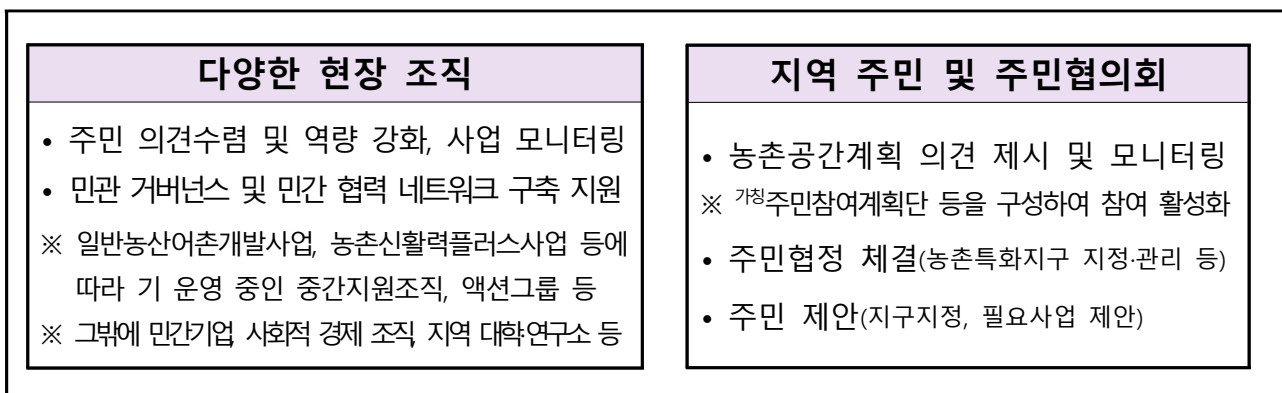
- **(공동체)** 인구감소·공동화, 생활인구 증가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행정리 단위에 한정하지 않는 새로운 공동체 활성화
 - * 인구감소 마을들을 연계한 확대된 생활권 단위 공동체 조직 육성
- **(생활인구)** 4도3촌·위케이션*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맞춤형 공간 조성(농촌 체류형 쉼터, 농촌 살아가기 체험농원 등)
 - * 농촌에서 일여가 병행 수요에 대응한 온라인 근무환경, 업무주거공간 지원 및 지자체·기업 협업
- 농촌 교류활동 지원 및 관계 심화를 위한 도농 지자체 간 연계·협력 강화



↓ 방향제시 · 사업통합지원 ↑ 계획 수립·이행



↓ 의견수렴 · 소통 ↑ 의견제안 · 협업



□ **회의 개요**

- 목 적 :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구성,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안) 심의
- 일 시 : 2024.4.18.(목), 10:00 ~ 11:30
- 장 소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귀농귀촌종합센터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4층
- 참 석 : 한 훈 농식품부 차관(공동위원장), 부산대 이유직 교수(공동
위원장), 학계·현장전문가, 청년위원 등 총 13명

□ **현장 사진(별첨)**

